

기본강의 헌법(전정2판, 1쇄, 2쇄 공통) 추록 최종본(2015.12.03.)

- 기본강의 헌법 2쇄(발행일 2015.5.26.) 탈고 후인 2015.5.초부터 2015.11.말까지 개정된 중요 헌법 부속법률, 변경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게재합니다. 기본강의 및 진모 강의중에 이미 배부한 내용은 물론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하였고, 2016년판 기본강의 헌법 출간일(2016.1.말 예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종추록이라 생각됩니다. “★ (1쇄용)”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기본강의 헌법 2쇄에는 반영되었으므로 1쇄(발행일 2015.2.13.) 소지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1쇄 소지자는 이번 추록 외에 2015.5.22. 작성하여 이미 게재한 추록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는 오타자 등은 게재하지 않았으니 양해 바랍니다.

- 공저자 金 柳 香

* 제19면 박스 2번째 칸 2단락 - 밑줄 친 내용으로 수정.

특 징	주관설은 헌법해석을 ‘법창조’가 아니라 ‘법발견’이라고 이해한다. 주관설은 해석자의 주관이 아닌 오로지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히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주관설은 헌법의 발달은 헌법개정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객관설은 헌법해석을 ‘법발견’이 아니라 해석자에 의한 ‘법창조’라고 이해한다. 객관설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법규범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객관설은 헌법의 발달은 헌법개정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본다.
-----	---	--

* 제33면 (나) 중 2줄 수정.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 “~헌법제정규정과 헌법개정규정의~”으로.

★ (1쇄용) 제98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② 밑줄 친 내용 추가.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145면 마지막 박스 판례번호 및 주문 - “(2013.3.28. 2012헌마34) ▶기각” → “(2014.6.26. 2012헌바382) ▶합헌”으로 수정.

* 제254면 박스 판례 주문 - “▶위헌”으로 수정.

- 공 백 -

* 제307면 박스 판례 2개(2003헌마538/ 2008헌마275) - 아래 판례로 변경됨.

현재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015.3.26. 2013헌마214등) ▶각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의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은 한 바 있으나,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부분은 변경한다.』

* 제318면 2줄 - “~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로 수정.

* 제330면 세 번째 박스 판례 삭제 - 간통죄는 위헌결정(2015.2.26. 2009헌바17)으로 판례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제340면 판례 추가함.

현재판례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2015.7.30. 2013헌가8) ▶위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부분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덕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사실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과의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제376면 (다) 본문 마지막 2줄 - “목표할당제” → “목표할당제”로 수정.

- 공 백 -

* 제424면 본문 마지막 줄 - (2011.12.29. 2010헌바117)" → (1997.9.25. 96헌가16)으로 수정.

★ (1쇄용) 제425면 마지막 박스 판례번호 - (2010.3.25. 2009헌마170) → (2014.4.24. 2011헌바2)로 수정

* 제439면 첫 번째 박스 판례번호 - (2006.7.27. 2005헌마277) → (2012.12.27. 2010헌마153)으로 수정.

* 제452면 두 번째 박스 판례번호 - (2009.6.25.2007헌바25) → (2014.4.24.2012헌바45)로 수정하고 해당 판례의 사건개요<판결선고 전 ~ 침해하는지 여부> 삭제함.

* 제479면 판례 추가함.

현재판례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2차결정(2015.7.30. 2012헌마734)

▶ 기각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이하 '실명확인조항'이라 한다),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실명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실명인증자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에 의하여 수집·관리된다는 점에서 실명확인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507면 마지막 박스 판례번호 및 주문 - "(2012.12.27. 2011헌바225) ▶합헌"으로 수정.

* 제546면 첫 번째 박스 비교 판례 추가.

현재판례 알권리의 법적 성격 (1991.5.13. 90헌마133)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¹⁾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1) 이 판례에서 사용된 ‘정보수집권’은 강학상 사용되는 ‘정보수집권’ 보다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로 생각됩니다.

- 공 백 -

* 제569면 “A.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내용 추가.

A.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1992.6.26. 90헌가23) ▶ **한정위헌**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제에 관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형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고 그에 위반하는 때에 규제를 하는 것이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등록요건인 동항 제9호 소정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 소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 제594면 두 번째 박스 판례제목 -“집시법상 야간옥외시위의 금지(2014.3.27. 2010헌가2등)

* 제625면 박스 판례번호-(2002.8.29. 2000헌가5등) → (1999.11.25. 98헌마456)으로 수정.

* 제652면 마지막 박스 판례-(2006.7.27. 2003헌바18) → (2012.11.29. 2011헌바49)로 수정.

* 제698면 첫 번째 박스 판례-(2005.11.24. 2005헌마579) → (2009.3.26. 2007헌마843)으로 수정.

* 제734면 (마) 내용 중 1줄 및 5줄 - “국가배상법” → “구 국가배상법”으로 수정.

* 제752면 판례추가.

현재판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위의 재결에 대한 불복금지(2015.7.30. 2014헌가7)

▶ **위헌**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거나 내부의 구체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한바, 공제회는 재결에 있어서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제회 역시 공제급여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 의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재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분쟁의 상대방인 공제회의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합의간주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공 백 -

- * 제760면 (나) 내용 중 1줄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직무를 집행하면서”

- * 제780면 2단락 뒤 내용 추가.
 - “~ 방법이 없게 된다. 다만, ‘입법위임규정설’에서는 입법자가 헌법위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등 헌법통제수단이 허용된다고 본다.”

- * 제786면 마지막 문단 1줄 -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에서~” 삭제.

- * 제831면 목차2. 목차3. 제목 - “근로권의~” → “근로3권의”로 수정.

- * 제852면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 삭제, 제3호 “기능직공무원” 삭제, 제4호 중 “및 계약직공무원” 삭제.

- * 제853면 첫 번째 박스판례 - 본문 1줄 “제33조 제1항에서” → “제33조 제2항에서”로 수정.

- * 제898면 2문단 1~2줄 내용 - “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곧 대의제는 국민의 자기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것을 부인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통치’가 민주주의의~” → 밑줄 부분 삭제하여 “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통치’가 민주주의의~”로 수정.

- * 제935면 목차 (2) 박스 2칸 내용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 “민주적 기본질서의~”로 수정.

- * 제937면 박스판례 아래 본문 6줄: “~헌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 “~정당법 제17조 제18조 제1항의”로 수정.

- ★ (1쇄용) 제954면 목차 (가) 1줄: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로 수정.

- ★ (1쇄용) 제955면 1줄: “대통령을 제소권자로 보는~” → “대통령을 실질적인 제소권자로 보는~”으로 수정.

- 공 백 -

* 제979면 - 제15조 대체함.〈개정 2015.8.13.〉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5.8.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15.8.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979면 - 제18조① 2. 대체함. 〈개정 2015.8.13.〉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8.13.〉

* 제979면 - 공직선거법 부칙 추가함. 〈2015.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공 백 -

* 제979면 - 주민등록법 추가함. <시행 2015.1.22.>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1쇄용) 제979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①. 대체함.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 제985면 첫문단 뒤에 추가함

그리고 최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8.13. 개정 공선법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 제986면 공직선거법 제16조 ③항 2~3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분 삭제함.

* 제987면 둘째문단 뒤에 추가함

그런데 최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8.13. 개정 공선법에서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일원화되었다.

* 제990면 마지막 문단 뒤에 추가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선거, 관할이 다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다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 공 백 -

* 제996면 공직선거법 제24조 대체함. [개정 2015.6.19.]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 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6.19]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9.]

부칙[2015.6.19 제133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②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을 이 법 시행일부터 둘 수 있다.

⑤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제1005면 목차 (1) 2문단 2줄, 마지막 줄 내용 중 - “~신임과 위임관계가~” → “~대표관계가~”로 수정.

* 제1016면 공직선거법 부칙 추가함. [2012.2.29.]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 제1017면 제35조② 1호 대체함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중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5.8.13.>

* 제1018면 첫문단 4~6줄 “전년도 10월 1일 ~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부분 내용 대체함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선거일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제1018면 목차 3. 본문 내용 대체함.

공선법상 ‘선거기간’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는데, 실제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에 불과하다(제33조 제2항).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한다(제59조).

* 제1044면 박스 1칸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등, 후보자등의 배우자”로 수정.

* 제1052면 제158조의3 ⑬ 추가함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 공 백 -

*** 제1052면 218조의4 ① 대체함**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1053면 제218조의5① 3호 대체함**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1053면 제218조의16 대체함**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 제1054면 1문단 뒤에 추가함**

한편, 최근 2015.8.13. 개정 공선법에서는 ①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38조제2항), ②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제158조의3제13항 신설), ③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④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있도록 하였다(제218조의16 제1항·제3항 및 제4항).

- 공 백 -

* 제1055면 1문단 뒤에 추가함.

그런데 2015.1.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 대신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국외거주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하여, 각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 제1149면 목차 (2). 3문단 1줄 “교섭단체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다.”로 수정.

* 제1176면 박스 ‘표결’란 2줄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부분 삭제.

* 제1204면 (나). 1줄 “예산은 ~ 계속비·예비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로 밑줄 부분 추가.

* 제1246면 목차 ⑤. 4줄 “(국회법 제163조 제3항)” → “(국회법 제163조 제4항)”으로 수정.

* 제1291면 박스 판례 (1) 부분 소제목 추가.

“(1) 적법 여부 - 기본권침해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296면 목차1. 첫줄 “헌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은~” →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으로 수정. 3줄 “~대통령(정부)에” → “~정부(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로 수정.

★ (1쇄용) 제1315면 목차1. 2~3줄: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14호)” 로 밑줄 부분 추가 및 수정.

- 공 백 -

* 제1319면 ③번 내용 대체

③ 대법원은 종래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심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1997.7.22. 96도2153),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재심청구를 인정하였다(2015.5.21. 2011도1932).

대법판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과 재심청구 (2015.5.21. 2011도193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353면 부속법률 - 감사원법 “제3조(원장)” → “제4조(원장)”으로 수정.

* 제1382면 부속법률 - 제13조 (대법원장) “① 대법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 “① 대법원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로 수정.

* 제1389면 본문 1~2줄 - “군판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군법무관 중에서~” → “군판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임용되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용된 군법무관 중에서~”로 수정.

* 제1397면 목차 4. 내용 대체함.

“재판공개 원칙을 어긴 비공개재판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의5 제9호 및 제383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호).” 로 수정.

- 공 백 -

* 제1415면 목차 a) 본문 뒤에 아래 내용 추가함.

“프랑스는 ~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종래의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제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cf. 예방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대표적으로 성낙인 교수)에서는 프랑스의 예방적 규범통제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칭한다.

* 제1487면 목차 d) 본문 3~4줄 “~위헌선언을 하기도 있다” → “~위헌선언을 하기도 한다”로 수정.

* 제1510면 목차 (나) 2문단 뒤 내용 추가.

“또한 ⑩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5차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2015.2.26. 2009헌바17등).”

* 제1517면 7번째 박스 판례 본문 3줄: “~하지 않고 있지 않은~” → “~하지 않고 있는~”으로 수정.

* 제1523면 박스 3칸 ‘미래효’ 본문 중 2문 “헌법불합치선언된 법률은 미래효가 적용된다.” 부분 삭제.

* (1쇄용) 마지막 박스 판례번호: (2014.3.27. 2012헌마590) → (2014.3.27. 2013헌마341)로 수정.

* 제1669면 본문 9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 “~헌법재판소는 국회부의장의”로 수정.